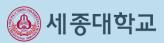
한국현대사의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4주차. 장면(1) 3강. 계획성 있는 자유경제





- 1. 장면 정권의 자유경제 정책기조의 내용은?
- 2. 그 정책기조의 추진 과정은?





- 1. 장면 정권의 자유경제론을 이승만 정권의 경제기조와의 차별선상에서 이해한다.
- 2. 장면 정권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, 그 정권의 경제론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3강 계획성 있는 자유경제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자유경제론이란 무엇인가?
- 장면 정권의 자유경제론이 이승만 정권의 경제론과는 무엇이 다른가?

0] 장면 정권의 '경제제일주의'

- ☑ 장면 정권은 경제정책 분야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대목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'경제제일주의' 추진
- ☑ 특히, 4·19 민주혁명의 완수가 경제 건설에 있다는 점을 강조
- ✓ 4·19 혁명으로 정치 혁명이 단행되었기 때문에, 경제 혁명을 통해 4·19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논리
 - ➡ 그동안 민주당이 '계획성 있는 자유경제'를 표방해 왔고
 - → 이 원칙에 의거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
- ☑ 이 계획성 있는 자유경제론의 주 이데올로그가 주요한과 김영선임



- ✓ 주요한은 장면 정권의 당면 과제를 네 가지로 제시;
 - ①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, 환율 현실화, 경제 계획기구 창설, 관영기업체 민영화
 - ② 경제개발계획에서는 기존의 계획에 전력 부분을 수정하고, 수출 적극화
 - 3 환율 현실화는 1961년 예산부터 적극 반영
 - 4 국영기업체는 모두 민영화하고, 정부의 허가권 및 통제권 최소화



국영/공기업

- 자본의 기본적 부분을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동시에, 기업의 기본적 경영방침의 결정권을 국가가 장악하는 기업
- 국영/공기업은 국가 자본의 한 형태이고, 그 목적은 설립의 여러 조건에 의해 다름
- 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의하는 때가 많음
-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으로 사적 자본과 함께 사회적 총자본 구성
- 잉여가치 창출, 이윤 분배

국영/공기업

-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의 역할 수행;
 - 국가의 정책에 종속
 - 이윤을 맹목적으로 추구함이 없이 직·간접으로 사적 자본의 이익에 봉사
 - 또는 전체로서 자본에 대한 체제적 보강의 역할을 수행
 - 사적 자본으로서는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사업을 담당
 - 타 산업에 대해 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
 - 저리 융자에 의해 사적 자본의 손실을 보상하는 등 사업 영위

국영/공기업

- 국영/공기업이 담당하는 사업 분야는;
 - 우편·통신·교통 등은 어떤 면에서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경영이 공익성을 우선한다는 공익 원칙에 따라 운영
 - 국가의 재정부담
 - 관료적 운영 방지
 - 독립채산제 강화,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

- ✓ 상공 정책과 관련하여 전력 개발, 수출 진흥,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둠;
 - ➡ 전력개발 계획을 민영 회사에 맡길 것임
 - → 〈전기사업령〉을 개정해 전력 3사를 민영화할 것임
 - ➡ 대충자금을 중소기업 자금으로 전환
 - ➡ 수출 진흥과 군납, 정부 투융자를 통해 중소자본가 지원
 - → 수입제한 철폐 등 자유경제의 기조 하에 대일본 통상도 극대화겠다고 천명
 - ⇒ 경제개발계획은 추진하겠지만, 그 외에는 자유경제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입장



대충자금

- 기원은;
 - 미국의 1948년 마셜플랜(Marshall Plan)에 기반
 - <경제협력법(Economic Cooperation Act) >이 규정하는 쌍무협정에 의거
 - 피원조국에 적립된 대충자금 중 5%를 전략물자 구입 및 미국 정부 파견기관의 제 비용을 위해 사용
 - 나머지 95%를 원조국인 미국 정부와의 합의하에 피원조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
- 적립된 대충자금의 성격은;
 - 무상 증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피원조국의 소유
 -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음
 - 대충자금 적립 제도를 통해 원조국은 피원조국의 경제 재건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



대충자금

- 한국은 8·15 광복 이후 민간 상업차관의 도입이 일반화된 1965년까지 약 39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받았음
- 도입된 원조 물자는;
 - 정부에 의하여 국내 시장에 공매
 - 공매된 원조 물자 판매대금은 대충자금으로 계정되어 적립
- 미국은;
 - 1948년 12월 한국정부와 〈한미경제원조협정〉 체결
 - 원조 증여의 조건으로 대충자금의 적립 요구
 - 이에 따라 1951년 4월 정부는 <대충자금운용특별회계법> 제정
 - 대충자금의 계정과 운용 방식 결정



2] 김영선

- ☑ 장면 정권의 당면과제
 - ➡ 환율 현실화, 농촌경제의 부흥, 토지수득세의 금납화, 부정축재자의
 처리
- ✓ 재정안정 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가운데 추진해야 함
- ✓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철저히 비인플레이션적인 방법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



2] 김영선

☑ 이를 위해서는 급속한 실천보다 순차적인 실시가 효과적

☑ 환율 현실화 역시 외환 자원이 확보된 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

✓ 부정축재자 처리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경제를 위축하지 않는 방향에서 다루겠다고 함

✓ 자유경제 정책과 경제개혁이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



2] 김영선

✓ 주요한과 김영선은 자유경제의 폭과 속도, 인플레이션 정책에 관해 대립



학습정리

- 4·19 혁명은 정치혁명이었기 때문에, 경제혁명을 통해 4·19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원칙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다.
- ? 이런 기조와 원칙에 기반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.

- 정진아. 2017. "장면 정권의 경제정책 구상과 경제개발5개년계획." 「한국사연구」176: 317-357
- 전상숙. 2010. "4·19와 장면정부의 수립: 『사상계』의 당대 정치담론을 통해 본 재고찰." 「한국정치외교사논총」 32(1): 41-74.